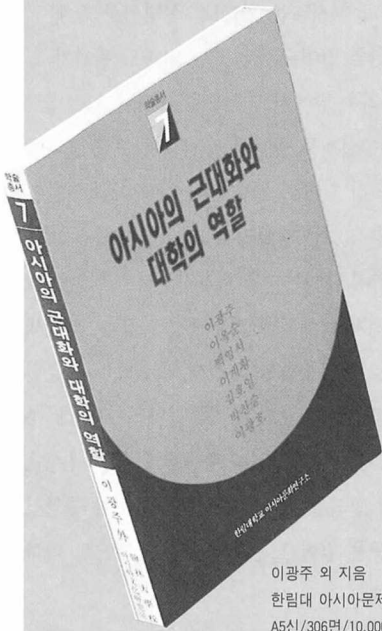


**대학의 도입경위와 아시아적 대응 점검
한국 대학사 연구 위한 토대 마련해**

《아시아의 근대화와 대학의 역할》



이광주 외 지음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A5신/306면/110,000원

이 책은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발표의 성과를 종합·정리한 것으로 전반부는 발표 논문과 토론자의 질의·응답을 실었다. 후반부는 전반부의 발표자와 토론자를 포함,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체적으로 문제점과 토론이 미흡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조직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사안들에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주장과 논지가 일방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상호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나라는 인도·일본·중국과 한국이며, 한국 대학과 관련된 논문은 세편이다. <대학교육과 인도의 근대화>는 식민지 인도에서 영국의 대학설립이 인도의 근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에 논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교육정책, 인도인의 자발적 태도, 사회구조상의 여러 문제와 연결되는 사항으로 교육정책의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책임이 영국이나 아니면 인도나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영국의 식민정책과 일본의 식민정책에 대한 이중 잣대를 경고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중국 대학의 경우 논자는 1920년대와 1990년대의 교육혁명을 규명하고 있다. 1920년대 개혁의 주류는 구학이나 구국이나의 논쟁에서 보듯 정치참여의 문제였으며, 1990년대는 경제참여 쪽이었다. 두 시기의 공통점은 대학이 사회적 출세의 사다리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신분제 사회에서 학력 사회로의 전이 양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일본 대학은 근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자율성이 크게 훼손된 것도 사실이다. 그 때문에 일본의 교육이 개혁되지 않고는 일본의 장래가 어둡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겠다.

한국의 대학설립 운동은 민립대학 운동의 좌절과정과 경성제국대학의 출현을 함께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1890년대의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한국 대학사의 전사(前史)로서 자리매김하자는 제안은 한국 대학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식민지 시기 도일 유학생 연구는 해방후 이 나라 지식구조를 분석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일본의 문화정책은 결국 친일세력 양성이 주목적이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다.

아시아 대학에 대한 논의는 결국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반영한다. 우선 근대화가 단순한 서구화가 아닌 주체성을 지녀야겠다고 대학교육이 대중교육일지 혹은 엘리트 교육일지의 방향도 점검해야겠다. 인문교육과 관련해 진리탐구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두 요소가 양립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균형 회복 또한 시급하다.

학생 집단과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가 어렵지만 이 책은 이들 논의를 위한 예비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아시아 몇 대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함으로써 한국 대학사 집필의 길을 열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가 크다.

이석우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저서 <대학의 역사> 외.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지역주의 연구
적절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해**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조기숙 지음
남남출판/A5신/274면/9000원

정치학에서 지역주의를 보는 시각은 아마도 구조주의, 기능주의, 그리고 역사주의가 있을 것인데, 굳이 분류하자면 이 책은 기능주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주의가 복합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 책은 기능주의라는 면에 착안하면서 현 눈 팔지 않고 천착한 고집스러운 글이라는 느낌을 준다.

지은이가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는 '합리적 선택'(9쪽)과 '최수의 번민 게임'(89쪽)인 것 같다. 지은이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통해 유권자들이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을 선택한 것'이 지역주의의 선거 양태로 나타났으며,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마치 감옥 속의 죄수가 자신이 선택했던 범주에 대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다고 유권자의 내면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16대 총선을 통해 지역주의가 많이 극복되리라고 예언했다(실제로 그는 선거 다음날 TV 대담에서 지역주의의 극복을 이번 선거의 의의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저자의 이와 같은 낙관주의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로 지역주의가 유권자의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으로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논리인데, 이 점은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

(43쪽), 이해 관계라면 거주지가 본적지보다 중요함에도 투표는 여전히 '고향'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주의 투표가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 아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역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의는 합리성이나 이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정서의 문제며 혐오감의 문제일 뿐이다. 어느 특정지역 출신을 찍기 싫은 심정은 이해관계에 의한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나라에 팽배해 있는 정서, 이를테면 어느 지역 출신에게는 전세를 놓고 싶지 않다거나 하숙생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과 꼭 같은 심정일 뿐이다.

둘째, 지역적 편견에 의해 투표한 사람의 심정을 '죄수의 번민'으로 표현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에게 물표를 던진 투표자와 김영삼 대통령에게 물표를 던진 영남 사람 중에서 죄의식에 빠질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히려 더 당당하고 의기양양할 뿐이다. 그들은 내부식민지니, 지역패권이니, 반사적 저항이니, '우리가 남이가' 하는 용어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으며 전혀 참회의 빛이 없다.

셋째, 이번 16대 총선에서 지역주의가 많이 청산됐다는 주장은 좀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영남에서 한나라당 이외의 인물이 하나도 당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청도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선자가 몇명 나왔다가 호남에서 위장된 민주당원인 무소속이 당선된 것만으로 희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가 더 내밀하고 지능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넷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권자들의 대화를 증진시키고 서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가능하다"(30쪽)는 논리에는 다소 낭만이 깃들여 있다. 이것은 유권자들의 결심 사항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결심 사항이다. 지역주의가 청산되지 않는 현실적 이유는 그것을 즐기는 정치집단이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오랜 뿌리를 두고 있는 몇 가지 역사적 유산이 증첩돼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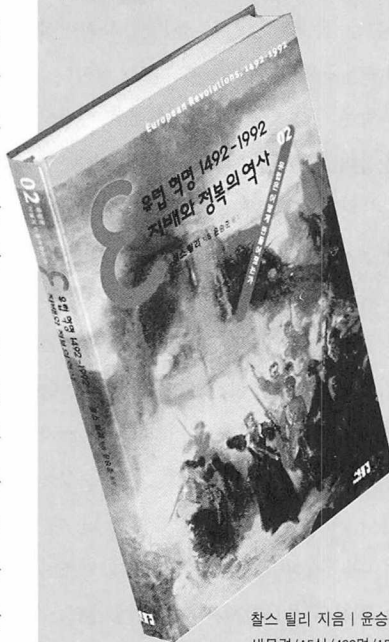
신복룡

건국대 정외과 교수. 저서 《한국정치사》 《전통중편전》 《한국정치사상사》 《한국의 정치사상사》 외.

서평

유럽혁명의 '잠정적 종합' 시도 목적론적 서술방식 탈피해

《유럽혁명 1492~1992 지배와 정복의 역사》



찰스 킬리 지음 | 윤승준 옮김
새물결/A5신/432면/15,000원

1492년부터 1992년까지 이베리아 반도와 발칸에서 혁명적 상황이 나타난 해수는 각각 157년이나 된다. 500년 역사에서 혁명이 차지하는 산술적 비율만 30%를 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는 120년으로 24%, 프랑스는 99년으로 20%에 육박한다. 네덜란드와 러시아도 각각 88년과 87년으로 18% 내외다. 유럽혁명 하면 막연하게 시민혁명만을 연상했던 내게 이 통계는 큰 충격이다. 찰스 킬리의 이 통계를 그대로 믿는다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유럽혁명의 역사는 사실상 유럽 근대의 역사다.

이 책에서 킬리는 유럽혁명에 대한 '잠정적인 종합'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혁명적 상황 속에서 엇비슷한 인과적 기제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자신의 판단 때문이다. 혁명을 종합하고자 했던 다른 책들이 일반적으로 범하고 있는 목적론적 서술, 즉 역사적 과거를 1640년이나 1688년 혹은 1789년이나 1917년의 거대혁명으로 치닫는 준비기로 취급하는 서술방식을 명백하게 거부한다는 점에서 킬리의 문제의식은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이 부정하겠지만, '인과적 일반화'라는 것은 결과로서의 현재를 통해 과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적론적인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인과적 일반화를 시도하면서도 목적론에 빠지는 않을 것이라는 킬리의 자신감은 역사사회학자인 그가 전문 역사가보다는 사실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혁명이라는 사건을 보는 그의 시각은 "역사적 설명이란 실제 있었던 일만큼 일어나지 않았던 일과도 관계가 있는 법"이라는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킬리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의 주요 결과를 추적하는 것 외에도 실제 사건 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비(非)사건들'은 왜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서술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 킬리는 유럽혁명을 크게 세 개의 경로로 범주화한다. 첫째, 스위스나 네덜란드 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집약적 경로다. 부르주아지가 국가건설에서 주동적 역할을 했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에 제동을 걸어 느슨한 공화국 연방으로 나아가는 경우다.

둘째, 러시아와 이베리아가 대변하는 강압집약적 경로로서, 거대한 특권귀족층과 방대한 국가관료기구의 기묘한 조합에 기초해 국가가 성립됐다. 자본이 발전하지 못한 이 지역에서는 정복과 왕조정치가 일상을 좌우했다.

셋째, 어느 정도 집중된 자본과 더불어 자율적인 지주귀족들이 공생한 자본화된 강압경로다. 영국과 프랑스, 프로이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국가들은 인력과 물자를 동원해 대규모 상비군을 무장시키고 재정을 조달하는데 앞의 두 국가군(群)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자본화된 강압경로를 따라 발전한 국가들이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킬리는 이상과 같은 세가지 기본범주를 기초로 유럽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진행한다. 저자의 장대한 스케일과 박식함이 돋보이지만, 작은 캔버스에 너무 많은 오브제를 그린 것이 아닌가 한다. 그도 결국 사실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임지현

한양대 사학과 교수. 저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마크스·엥겔스와 민족문제》 《바르샤바에서 보낸 편지》, 역서 《프랑스 혁명사 3부작》(공역) 외.